

“올림픽 공사 지역업체 우대방안 제정”

도내 건설단체 회장단 성명서 강력 촉구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시행규칙 만들어야”

속보=도내 건설단체가 평창동계 올림픽 관련 시설공사에 지역업체 우대방안 제정(본보 23일자 2면 보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소속 정동기 건설협회 도회장, 이강훈 전문건설협회 도회장, 장효성 설비건설협회 도회장, 허민구 도 건축사회장, 박원일 엔지니어링협회 강원지회장, 조병철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도회장 등은 23

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시행령 공포와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내 건설단체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 시행령에 지역기업 우대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기지 않고 관련 부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내용만 담겨 있다”며 “이에 동계올림픽 시설공사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지역건

설산업 활성화를 기대한 도내 건설인의 실망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계올림픽 공사·물품·용역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량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업체 의무하도급(계약금액의 30% 이상) 시행 △지역 내 생산물품·자재·장비·용역의 우선 사용 등을 규정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건설단체들의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들어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공사의 대형화 등으로 도내 건설업 부진이 잇따르면서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는 등 위

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올림픽 시설공사에도 배제되면 대부분의 업체가 대형 외지업체에 밀려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동기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지역업체의 참여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특별법 제정취지를 조속히 실현하고 실질적인 우대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제정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동계시설 구축, 지역 업체 의무하도급 보장을

불만스러운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급기야 지난 22일 공포됐다. 이로써 모법인 특별법과 함께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고하게 세워졌다. 그러나 개최지인 도와 도민의 입장에서는 실속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유치목적이 무색하다. 시행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조치라도 충실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

시행령에는 대회 관련시설 건설과 대회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이 명시됐다. 또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시행절차와 방법이 적시됐다. 하지만 도가 요구한 사항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이로 인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질지 의문이다. 그나마 도의 입장 관철 여지가 들어 있는 조항들도 두루뭉술해 실효성이 결여됐다. 대회 직접 시설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고 했다. 특구 내 경관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비율도 ‘기재부장관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울어야 짚을 줄 셈이다.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시설물 구축·조성에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험난하다. 관심의 초점이었던 지역기업 참여 우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지만 역시 기재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로 진행하게 했다. 따라서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휩쓸게 볼 보듯 뻔하다. 가뜰이나 경기침체로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판이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남의 잔치’를 구경만 할 상황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시행령이 공포되자 도내 건설단체 회장단이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계올림픽 공사·물품·용역의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공사량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 시행 △지역 내 생산물품·자재·장비·용역 등의 우선 사용을 요구했다. 올림픽 개최지인 만큼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며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마저도 외면하면 민심도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이 명심하기 바란다.

올림픽 지역 건설사 우대 촉구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시행령 구체적 우대 내용 없다” 성명

도내 건설업계가 최근 공포된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에 지역 건설업체 우대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를 비롯한 9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강원건설단체연합회(이하 건단연)는 22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업체 우대 방안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단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에는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

은 채 관련 부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내용만이 담겨졌다”며 “올림픽 시설공사에 지역 내 생산자재, 인력을 투입하는 등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강원건설인들은 크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탄식했다.

또 “현재 지역건설산업은 정부의 S0C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유례없는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특별법 제정취지를 조속히 실현하고 실질적인 우대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제정 등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건단연은 이날 구체적인 우대방안으로 △동계올림픽 공사·물품·용역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량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내 생산물품·자재·용역 등의 우선 사용 △지역업체 의무도급(계약금액의 30%이상) 시행 등을 요구했다.

정동기 건단연 회장은 “최근 들어 건설공사는 대부분 대형화로 발주

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마저 지역업체가 배제돼 외지 대형업체들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연합회 회원 모두는 역사적 산물이 될 동계올림픽 시설공사의 품격있고 완벽한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해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해 경쟁력 있는 건설기업으로 만들겠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건설업체가 올림픽 공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후속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현철

